

5개 부처, 최대 1억원 바우처로 창업 도운다

(전용카드)

청년 창업가 기술혁신 지원사업

교육이수·평가 따라 차등 지원
멘토링·인건비·임차비도 포함

정부가 자부담 없이 사업화 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창업지원 사업에 참가할 청년창업가를 모집한다.

2일 창업진흥원에 따르면 창업진흥원은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의 성공을 위해 '2018년도 기술 혁신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모집공고를 발표했다.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예비)창업자의 사업 초창기 사업화를 위한 자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해 유망 청년인재의 창업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바우처' 방식으로 사업화 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자부담은 없다. 창업자에게 금액한도를 정해 바우처를 지급, 창업자는 전용카드를 사용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후 승인 신청을 받는다. 이후 한도가 차감되면서 대금이 판매업자로 이체되는 형태다.

평가 결과에 따라 바우처를 차등 지원하고, 사업비 비목별 세부기준은 최종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대표자를 제외한 회사 소속 직원의 인건비, 외부전문업체의뢰비 등 시제품제작비, 재료구입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홈페이지·홍보영상·제품 카탈로그 등 마케팅비 등은 지원비 내에서 한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2018년 기술 혁신 창업 지원사업 모집 개요

부처	운영기관	주력분야	모집 마감	규모 (개)
국토부	한국교통연구원	자율차, 스마트모빌리티 서비스 등	8월20일	10
	한국도로공사	자율협력주행	" 17일	5
	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시티	" 17일	15
	스마트도시협회	스마트시티	" 30일	20
과기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빅데이터, 차세대 통신, 인공지능 등	" 29일	150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기술	" 17일	15
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스마트의료기기/뷰티, 헬스케어 등	" 29일	20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디스플레이, 웨어러블	" 24일	10
산업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지능형로봇	" 9일	20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 24일	10
금융위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	" 20일	25

여기에 기술이전비·법인선립비 등 지급수수료와 기계·소프트웨어(SW)구입비 등 기자재구입비, 사무실 임차비는 사업비 20%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또 간접비용의 경우 출장여비와 소모품 구입은 월 50만원 한도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필수인 전담멘토비는 멘토링, 서비스기업 추천 등 월 50만원 의무로 계산해 올린다.

해당 사업에 선정된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40시간 온·오프라인 교육도 운영하며 창업자는 협약체결 이전에 사전교육 24시간(9월 예정)한다. 이수하지 못할 경우 바우처를 지

원받지 못한다. 또 협약기간 중 권역별 집체 교육을 16시간 운영하는데, 역시 이수하지 못할 땐 지원을 중단하거나 기집행한 바우처를 환수 조치한다. 지원기간은 협약 후 10개월(2019년 6월 31일) 이내다.

모집분야와 일정은 각 부처별로 다르다. 우선 국토교통부의 경우 4개 운영기관을 뒀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자율주행차와 스마트모빌리티 서비스, 스마트 교통시스템, 맵 서비스 등을 주력분야로 오는 20일까지 10개 팀을 모집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자율협력주행을 주력분야로 17일까지 5개팀 모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스마트도시협회는 스마트시티를 주력으로 각각 17일과 30일까지 15·20개팀을 선정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빅데이터와 차세대 통신, 인공지능, AR·VR, 정보보호 등을 주력분야로 29일까지 150개 기업을 모집,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에너지기술 분야 15개 기업을 17일까지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스마트의료기기와 뷰티, 헬스케어, 혁신신약 등 분야로 29일까지 20개 팀을 모집하며, 금융위원회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핀테크 분야 25개 기업을 20일까지 모집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가 디스플레이와 웨어러블 분야 10개 팀을 24일까지, 한국로봇 산업진흥원은 지능형 로봇 분야 20개 팀을 9일까지 모집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10개 팀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할 계획이다.

각 운영기관별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사업공고일(2018년 7월 31일) 이전 창업(사업자등록·법인설립) 경험이 없고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인 2019년 4월 30일까지 창업이 가능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신청·접수를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조계현 원장의

특 특 창업이야기



외식업 불황 속 마케팅 돌파전략

경기불황의 터널 속에서 여전히 정체중인 외식업의 입장에서는 김영란법, 최저임금제, 주52시간 근무제 등의 다양한 사회적 변수로 인해 치열한 생존경쟁과 매출하락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외식사업을 하려는 예비창업자나 기존 외식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은 마케팅전략으로 상황을 돌파하려는 방법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불황시대의 외식업의 마케팅전략은 어떻게 달라져야 자신이 운영하는 외식업소의 경쟁력을 끌어올려서 고객유입을 확대하고 매출도 견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첫 번째 마케팅 전략은 대표메뉴를 만들라는 것이다. 고객들은 외식업소에 가서 여러 메뉴를 시켜먹더라도 한 가지 메뉴만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대표메뉴는 최고의 상품력을 가진 메뉴로 구성하고 맛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표메뉴는 사이드 메뉴부분에서 만들지 말고 반드시 메인 메뉴부분에서 대표메뉴를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 마케팅 전략은 전체메뉴의 개수를 줄이라는 것이다. 불황기 메뉴 구성의 핵심은 단순해지는 것이다. 고객이 기억하기 쉽게 메뉴를 구성하고 잘 팔리는 메뉴들만 살려두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제거를 할 필요가 있다. 메뉴 개수가 줄어들면 조리도 단순해져서 주방인력 감축도 가능하고 단순 반복이 진행될수록 음식의 맛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연구와 노력이 가능해져서 결국은 맛이 상승하는 효과도 있다. 또한 식자재의 재고나 유통기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서 원가관리가 쉬워진다. 세 번째 마케팅 전략은 가격대비 고객만족도를 끌어올리라는 것이다.

본인이 고객 입장에서 부담을 느끼는 가격대면 고객도 실제로 부담을 느낀다. 그러나 가격은 본인이 생각하는 가격에서 80~90% 선이 어찌면 적정할 가능성이 대체로 높다. 물론 대중업소인지 고급업소인지와 주요 고객층의 수준에 따라 가격대의 설정전략은 달라야 한다. 또한 가격만 내린다고 고객이 오지는 않는다. 당연히 항상 맛이 최우선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가격대의 조정도 효과가 있는 것이다.

네 번째 마케팅 전략은 점심매출을 강화하고 저녁매출은 파격으로 승부하라는 것이다. 대개의 불황은 저녁매출에서 그 타격을 제대로 입는다. 그렇기에 점심매출을 현재 수준보다 더 강화하는 컬러 메뉴의 추가 런칭이나 세트메뉴의 보강 등의 전략을 실행하고 저녁매출을 위해서 좀 더 파격적인 운영전략이 필요하다. 파격적인 메뉴의 개발이나 독특한 세트메뉴의 구성 그리고 가격할인 등의 전략들이 저녁 시간대 매출견인에 효과가 크다. 더불어 자신의 메뉴를 배달형 메뉴화 작업을 통해 음식배달도 과감하게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 마케팅 전략은 가족마케팅, 주부마케팅, 지인마케팅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가족형 메뉴와 어린이 메뉴의 출시를 하고 주부들의 모임을 유치하려면 주부들의 기호에 맞는 메뉴의 런칭과 매장 분위기의 변화도 필요하다. 또한 관계의 특성상 방문시 매출을 아끼지 않는 지인들의 관리를 통해 모임이나 행사 등의 유치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언론, 방송,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다양한 홍보매체형 마케팅에 투자를 하라는 것이다. 손님이 줄어든다는 일부 맛집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수준의 외식업소라면 적어도 매출의 일정 부분을 고정 홍보비용으로 책정하는 것이 좋다. 다양한 홍보방식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홍보 전문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한국지역산업연구원 원장>

광주전남 중기청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청(청장 김진형)은 '2018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추경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스마트 공장(smart factory)은 설계·개발, 제조 및 유통·물류 등 생산 과정에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이 결합된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생산성, 품질,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인공지능형 생산 공장을 뜻한다.

이번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추경사업을 통해 금년도 상반기 90개사 지원에 이어 추가적으로 지역 49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며, 스마트공장이 구축되지 않은 중소기업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과 이미 구축된 스마트공장의 고도화를 지원하는 '생산현장 디지털화'로 나뉘어 진행된다.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은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의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500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은 스마트공장이 구축된 중소제조기업의 수준 향상을 위한 고도



지난 3월 열린 '2018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전시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화 사업으로 기업당 최대 1억원(매칭비용 차등 지원)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스마트공장 구축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공급기업과 먼저 매칭한 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은 '스마트공장 추진단 사업관리시스템(bms.smart-factory.kr)',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은 '정보화지원

사업종합관리시스템(it.smlplatform.go.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직원과 전문위원이 현장방향을 견설링을 하는 등 사업 종료 시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식품 창업 연구개발 자금

농림부, 5천만원까지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이 창업한 식품 초기기업인 '푸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스타트업은 초기 자금 부족으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보다 영업·판로에 대한 지출을 우선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푸드 스타트업이 기존 업체와 다른 차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농식품부는 설립 1~5년 기업으로 대표자가 만 40세 미만 청년인 식품 분야 소기업 10곳을 대상으로 과제별 연구 기간 1년 이내, 정부지원금 50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전문가와 연결, 시제품 제작, 비즈니스 자문, 바이어 매칭 등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CHANNEL A
매주 목요일 밤 11시
이덕화 | 이경규 | 마이크로닷